

도내 동부권 지역 암 발생률 높아

전북지역에서 물 맑고 공기 좋기로 유명한 '장수군'과 '무주군', '순창군' 등 일부 동부권 지역의 암 발생 빈도가 전국적으로 높은 곳으로 손꼽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보공단 자료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소희 교수에게 의뢰, 재구성해 분석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암 환자는 138만명으로 2013년 124만명이었던 환자 수가 2년 만에 14만명 증가했다.

전국단위 분석 결과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폐암(10만명당 61.2명), 위암(10만명당 79.8명), 간암(10만명당 53.9명), 대장암(10만명당 65.6명), 췌장암(10만명당 12.3명) 발생률이 더 높았다.

여성은 남성보다 피부암(10만명당 12명), 갑상선암(10만명당 110.6명)의 발생률이 더 높았다.

이를 시군구별로 분석해보면 남성의 경우 폐암은 '장수군'이 10만명당 90.7명(전국평균 61.2명)으로 전국 최

폐암·췌장암, 각각 장수·무주 전국 1위

순창군, 폐암·간암(여성), 피부암(여성) 발생률 ↑

장수군, 폐암·췌장암·(남성)피부암

부안군, 피부암(남성)과 폐암(여성)

정춘숙 의원 "시군구 단위 암 정보시스템 구축해야"

고를 기록했으며 '순창군'이 89.4명으로 2위에 랭크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췌장암의 경우는 전북 3곳의 발생률이 전국 평균치를 웃돌아 전북도 보건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무주군이 10만명당 28.6명(전국평균 12.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가운데 임실군은 20.9명, 장수군 18.5명으로 각각 전국 6위와 10위를 기록했다.

남성 피부암의 경우 전남 강진군이 10만명당 22.6명(전국평균 9.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부안군'과 '장수군'이 10만 명당 각각 18.6명,

17.1명으로 전국 5·6위를 차지했다.

남성 유방암의 경우 진안군이 10만명당 1.4명으로 전국 10위에 올랐다.

여성의 경우 폐암은 충남 태안군이 10만명당 40.9명(전국평균 26.5명)으로 전국에서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가운데 '순창군'과 '부안군'이 각각 35.7명, 35.1명으로 7위와 8위에 기록된 불운을 안았다.

여성 간암과 피부암에서는 '순창군'이 또 도마에 올랐다.

순창군은 여성 간암 발생률이 10만명당 30.5명으로 전국 5위, 피부암 발생률은 10만 명당 19.7명으로 전국 10

위에 적시됐다.

도내에서는 주로 동부권 지역에서 암 발생률이 높은 것이다.

지역별로 정리해보면 '순창군'은 폐암(남·여성)과 췌장암, 피부암의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 '장수군'은 폐암(남성)과 췌장암, 피부암이, '부안군'은 피부암(남성)과 폐암(여성)이, '무주군'은 췌장암(남성)이, '진안군'은 유방암(남성)의 발생률이 높았다.

특히 임실군은 남성 췌장암 발생률이 높았지만 여성 간암은 10만명당 7.3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그간 암 환자 발생 원인에 대해 식생활이나 흡연, 음주 등 주로 개인적 원인만 지목돼 왔을 뿐, 환경적 원인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다"며 "보건복지부는 하루빨리 시군구 단위의 암 환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군집지역 암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환경적인 원인을 찾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함포 사격 등 강경 대응

정부가 점점 호풍화되고 있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시 함포 사격을 가하거나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폭력사용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외교부와 국민안전처, 국방부, 법무부 등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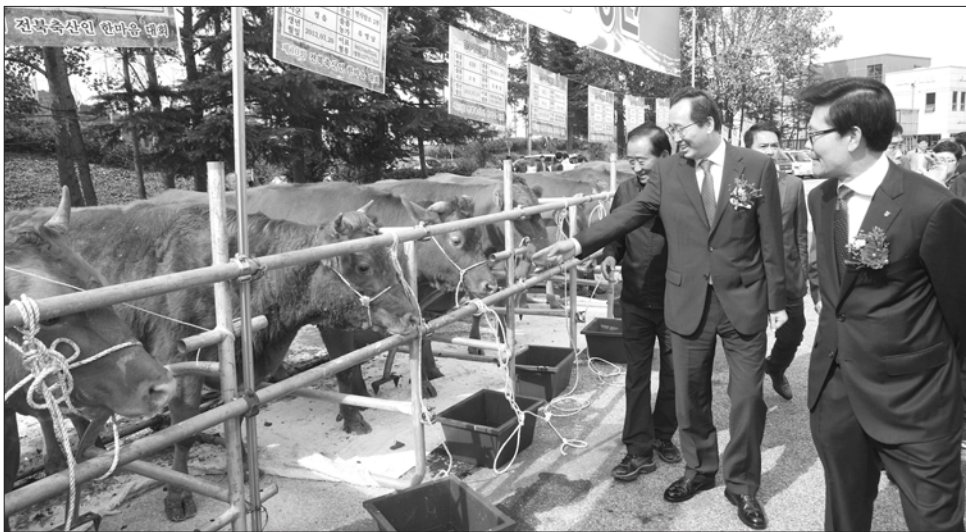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 방해 중국어선에 대해 함포 등 공용화기 사용과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 해경이 중국어선을 진압하기 위해 M60 기관총을 사용한 적은 있었지만 20mm·40mm 함포를 사용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도주 등으로 우리수역내 검거가 어려운 경우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작전으로 전환기로 했다.

대형함정 4척, 특공대, 헬기 등을 투입한 '불법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며 선제적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해수부·해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중국어선의 불법 폭력 저항이나 어선을 이용한 고의 충돌 등 단속세력을 위협할 때에는 공무집행 방해로



전북 축산인 한마음대회 축산인들의 한마당축제인 제10회 축산인 한마음 대회가 1000여명의 축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익산시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최후 경진대회와 축산인 한마음 단합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관련기사 8면>

전원 구속 수사하는 등 사법처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조업한 경우에는 어선 몰수를 강화하고 몰수 판결시 즉시 폐기처분토록 했다.

정부는 특히 중국어선 단속에 적합한 함정을 설계해 불법조업 단속전담

함정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또 서해 NL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올해 추경예산에 중형함 3척, 고속방탄정 2척 건조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도주어선을 검거하기 위해 검문검색

공용화기 사용·선체충격 등 공해상도 추적·사법처리 강화

새만금 솔베이실리카코리아 공장 준공

새만금개발청, 15개 동 임시사용 승인... 이달 안에 가동

지난해 4월 첫삽을 뜬 새만금산단 솔베이실리카코리아(주) 공장이 준공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11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에서 건축 중인 솔베이실리카코리아(주)의 공장 16개 동 가운데 먼저 준공한 15개 동에 대한 임시사용을 최근 승인했다.

나머지 1개 동은 공장 가동과는 연관이 적은 창고 동으로 이달 말 준공된다. 솔베이실리카코리아(주) 새만금 공장은 이달 안으로 가동될 계획이다.

이웃 공장은 제3세대 공정기술을 솔베이 그룹 본사로부터 도입해 솔베이의 가장 최선의 혁신공정기술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장건설로 그동안 프랑스에서만 생산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프리미엄 실리카의 국내 자체 생산이 가능해지고 제품의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수출 증대도 기대된다.

1,210억원이 투자된 이곳 공장에서는 타이어의 주원료인 무정형실리카를 연간 4만 8,000톤 규모로 생산하게 되며 향후 지역경제 및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만금산단에는 OCSB(주)와 도레이첨단소재(주)가 입주한 상태로 솔베이실리카코리아를 포함 이들 기업이 본격 가동되면 새만금산업단지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문정근 기자

'청년농' 농림수산물발전기금 무이자 지원

도, 40세 미만 대상... 시설·운영자금 1년간 무이자 융자

전북도가 청년농 육성을 위해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들 대상으로 농림수산물발전기금을 무이자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농림수산물발전기금 무이자 지원은 청년들이 보다 쉽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해 농촌에 청년 유입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젊고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사업자금을

농협을 통해 융자해주고 융자이자의 일부를 이차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만 40세 미만 청년농에 대한 시설·운영자금은 1년간 무이자 융자대출이 적용된다.

중점 시설·수매자금으로 개인 2억원, 법인은 5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었던 것이 개인 5억원, 법인 2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고민형 기자

도,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21일부터 특별점검

전북도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인다.

11일 도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주간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각 시·군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대상은 55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이다.

리업체이다.

중점 점검 내용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덮개 설치 여부 ▲비산방지·약취·침출수 방지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도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고민형 기자

국고 보조금, 적정성 확인후 민간에 교부해야

앞으로 정부는 지정 계좌를 두고 국고보조금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중·부정수급 등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교부 방식을 개선했다.

정부는 보조금을 민간사업자에게 바로 교부하지 않고 지정된 계좌에

일시 위탁하게 된다. 이 계좌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지방재정의 주요 사항을 공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치체장과 협의해 지방재정 관련 공표 항목을 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만이 시행령상 공표 대상이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